

시의회, 원구성 3개월 만에 '운영위원장 사퇴 촉구' 논란

운영위원들, 정다운 위원장 사퇴 주장... '탄핵'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 민주당 조율로 지도부 꾸리고 스스로 부정...신 의장은 갈등 중재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감투싸움'으로 인한 파행 속에 시작된 제9대 광주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4개월도 안 돼 또다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특히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조례에도 없는 상임위원장 사퇴를 위한 조례 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드러났던 의원들 간 갈등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 의원들 간 갈등 중재에 나서야 할 시 의회 의장은 '운영위원장 의장인 자신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뒷받침만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광주시의회와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은 최근 신수정 의장에게 정다운 운영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이날 정 위원장에게는 직접 자진 사퇴를 요청했다.

운영위 소속 의원들은 의회 운영을 책임질 운영위원장이 의장과 운영위원, 의원들과 소통이 부족하고, 집행부인 광주시청 측을 두둔하면서 의회 운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위원장 사퇴 요구' 로그까지 확대된 배경에는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빚어진 의원들 간 갈등의 불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9대 광주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원 구성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재투표를 하는 등의 잡음이 이어졌고,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가결된 여결위원 명단을 의원총회를 통해 독단적으로 바꾸는 '꼼수'를 부리는 등 일당 독재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처럼 각종 잡음으로 이어지면서 후반기 원 구성은 개원 49일 만에 일단락되는 존극을 맞았다.

이처럼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시작된 후반기 광주시의회가 원 구성 3개월 만에 운영위원장 사퇴 요구로까지 이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배제한 채 '황포'에 가까운 내부 조율과 투표를 거쳐 지도부를 꾸린 것을 스스로 부정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운영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A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자료 부실 등 단일한 대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입장문 발표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정 위원장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원이자 운영위원장이 집행부 편을 들며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 의원도 "정 위원장은 '의회 운영'을 하는 운영위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의원들 간 의견 조율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내부에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운영위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운영위원들은 정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의원 전원 사퇴'에 의견을 모았고, 위원장 '탄핵'을 할 수 있는 조례 제정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 구성이 이뤄진 지 3개월 만에 몇 가지 지적사항을 이유로 임기가 2년인 위원장 사퇴를 주장하고, '탄핵'을 위해 조례 제정까지 나서는 것은 의원들 간 보이지 않는 '정치적 프레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진 지 3개월도 안 돼 위원장 '탄핵'은 어불성설이다"면서 "시간을 두고 의원들 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를 일부 의원들이 담합해 위원장을 '축출'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패거리 정치'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 의장의 '역할론'도 지적되고 있다. 의회 운영을 위해 의원들 간 갈등 중재에 나서고 의회 내 '불협화음'을 해소해야 할 의장이 운영위원들의 위원장 사퇴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다운 위원장은 "의원들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었다"며 "의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지켜봐달라"고 말을 아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LNG·수소 극저온시스템 연구센터 개소식 김영록 전남지사가 25일 목포대학교 신해양산단캠퍼스에서 열린 'LNG·수소 극저온시스템 연구센터 개소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영암 가금농가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차단 총력

초동방역팀 투입...반경10km 방역지역 설정·이동제한 등 추진

영암 가정형 가금농가(토종닭사육)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됨에 따라 전남도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병원성 여부는 국립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중으로 최대 3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당농장은 토종닭 14마리, 기러기 4마리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이다. 24일 농장주가 폐사 경사로 신고,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24일 의심축 신고 접수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도 현장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 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H5형 검출단계에서부터 발생농장 사육가금을 선제적으로 예방적 살처분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 이동 제한 조치를 하고 소독을 하는 한편, 방역지역 가금농장 일제검사, 토종닭 수매·도태를 추진한다. 닭·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해 25일 저녁 10시까지 24시간 일시 이동중지상태에서 일제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영암 방역지역에 소독차량 9대를 동원해 일제소독을 실시 중이다.

전남도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현

장점검반 28개반(도·시군)을 편성해 가금농장, 축산관련시설 등 399개소를 점검했으며, 발생상황 등에 따라 별도 점검계획을 수립해 지속 추진하고 있다.

22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해 축산차량에 대해 꼼꼼히 소독 후 소독필증을 휴대하고 농장에 출입하도록 하고, 도내 소독차량 150대를 총동원해 농장과 철새도래지 등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전남규모 가금농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가금사육농가에서도 AI 차단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형 만원주택' 도의회 예산 삭감에 주춤하나

신혼부부·청년 유입 등 인구 소멸 극복 핵심 사업 차질 우려

전남의 핵심 현안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예산이 전남도의회에서 일부 삭감되면서 차질이 빚어질 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22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사 뒤 '전남형 만원주택' 권립사업 예산 10억원을 삭감했다.

전남도는 예초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지방소멸기금 120억원과 자체 예산 30억 등 150억을 투입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체 예산 중 10억원을 삭감해 다른 사업에 반영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전남도는 16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 절차를 거쳐 고흥(50세대)·보성(50세대)·진도(60세대)·신안(50세대) 등 4곳을 확정하고 입주 일정을 고려해 내년 초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고흥·진도는 오는 2026년 3월, 보성·신안은 2026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도로관리사업소 관할 도로만 2900km에 달하지만 17개 시·도 중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17개 시·도 중 가장 적어 주민 고통 해소를 위한 우선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그러나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전남형 주거복지 확립을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중대재해 막자'...광주시, 위험성 평가 집중점검

12월10일까지 76개 사업장

광주시는 "시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현업부서 종사자들이 일하는 7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2월 10일까지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위험성 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고 위험에 노출된 현업업무 종사자와 시청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함으로써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특히 지난해 위험성평가에서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된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등 1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진단기관을 통해 자율 안전진단을 병행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추정·결정 사항에 따라 즉시 개선 조치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마련해 장기적 개선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